

2강 - 교사의 권리와 의무

■ 핵심용어(용어사전)

- * 기본권의 충돌(상충) :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학습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 수업권 :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 사례1 :

<사건의 개요>

사립 고등학교 교사 A는 B학원 소속 교사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 지부 소속으로, 재단 내부의 비리문제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5일간 담당과목 수업을 거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학급 반장 및 학생회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회에서 수업거부 결의가 있었다. 수업거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과 다른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님들의 수업 및 학생들의 수업을 복과 뺑과리를 치면서 방해하였다. 이에 고3 학부모들 일부가 A를 상대로 고3수험생 자녀가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학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학부모님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교사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부모와 학생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교사 A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의견>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없다.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지 않으며,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교원이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본 학습>

1. 교원의 권리

교원이 전문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보장 · 생활보장 · 근무조건 개선 등의 권리와 신분보장 ·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 소극적인 권리가 있다.

가. 적극적 권리

(1) 자율성의 보장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의 수행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조건이며,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교원의 자율성은 상급기관이나 교육행정 계통과의 관계, 학교장 학교 장학활동과 교사의 교육활동과의 관계,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나친 간섭에 대한 학급담임의 자율권 행사, 또 사립학교에서의 재단의 간섭과 학교교육의 자율적 운영과의 관계에서 침해될 소지가 있다.

(2) 생활보장

교원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말하는데 생활보장은 일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 급부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야 하며, 교직에 전념하는 직업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직종들은 자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극한투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보장을 위한 권리행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국가와 사회는 교원의 생활권 보장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근무조건 개선

교원이 그들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과 정비를 해 주어야 하며 전문직인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적정량의 근무부담이 주어져야 한다. 근무 조건의 개선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의 변화, 교수-학습과 관련이 먼 잡무 등의 경감이 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 교원의 근무조건으로 가장 민감한 것은 주당 수업시수이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학급당 인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담당 수업시수가 다르게 된다. 각 학교별로 담당 수업시수 기준을 정해서 그보다 많은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현실적인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교원의 복지·후생제도는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에 대한 유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혜택을 주는 것이다. 연금제도 및 자녀를 위한 학비 및 장학금 지급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국립박물관 무료입장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나. 소극적 권리

(1) 신분보장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송제기권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조치를 금하고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로서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같이 국가와 공법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등과의 사법상 관계에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의 불체포 특권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장하고 있다.

(2) 소송제기권

교원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청구 기타 행정상 소송제기권을 가진다. 재심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징계처분 대상자인 교원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될 때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 단위로 설치된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3)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교원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권력기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장이 교원의 체포에 동의할 때에는 범죄 혐의가 확립할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4) 교직단체 활동권

교원은 자신들의 권리 확보와 직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들이 단체를 조직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 유대강화, 회원들의 복지향상, 회원들의 자질 향상 등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별로 교육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단체 조직권은 단체행동권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 또는 정당과는 구별되며, 파업과 같이 극단적인 쟁의수단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노동조합과도 구별된다. 교육의 발전과 교원 자신들에 관한 제방 정책 형성에 있어서 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고, 국민 모두에게 교육의 기능과 교육의 현안 문제, 그리고 교육의 과제를 알리는 홍보단체이기도 하다.

현재 교직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원의 옹호 확대를 도모하며,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교직단체로서 교권옹호를 비롯하여 교원의 생활권 증진, 교원윤리의 확립, 교육행정의 개선, 교원연구, 청소년 복지증진, 교육도서 간행, 국제협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무 집행권, 직명사용권,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기타 재산상의 권리 등이 있다.

2. 교원의 의무

의무란 법률이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강제성을 띤 개념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규정은 교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고 또 교원의 의무

는 시대적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적극적인 의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이며, 소극적 의무는 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가. 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교원의 의무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 교육 및 연구 활동이며, 교원의 근본적인 사명은 가르치고 연구함으로써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원은 ‘학생 또는 원아를 지도한다.’ 라고 하였고, 고등교육법 제15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사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학 교수는 교수·연구·지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연구는 대학의 학문의 자유 및 학문 발전을 위한 교수의 임무이고, 교수 및 학습지도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규정한 것이다.

(2) 선서·성실·복종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교원은 취임 전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공직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며,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설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원은 고용주인 국가나 학교 법인과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고용관계를 형성함으로 일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에 대하여 일정한 역무를 제공한 의무를 진다. 교원의 직무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과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르는 각종 행정처분을 받는다.

③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 상급자는 당해 교원의 직무에 관해서 지휘·감독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상급자를 말하며 신분상의 상급자보다는 직무상의 상급자를 말한다. 교원의 직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학생을 지도·교육하는 기능과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상하의 복종관계이기 보다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교육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며, 교원에 대한 상사의 직무명령은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전문직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성실히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직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교사 교육권의 내용

교사의 교육권의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전문적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교육과정 편성, 수업내용, 교육방법, 교재의 선정, 성적 평가 등의 교육 전문적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동·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교사의 교육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부모나 보호자가 결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및 평가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시대적·국가적·국민적·학문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워지는 것이며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는 서로 단절적인 과정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 수업을 통해 변화하는 가치창조적인 일이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타 교육당사자에게 함부로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가.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과정이란 각자의 관심영역, 교육철학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의도된 학교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단순한 교육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목표, 내용, 방법이나 운영방식,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교재의 선택·결정권

교사의 교재·선택 결정권 문제의 초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누가 만들며,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검인정제도는 교과용으로 제작된 도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법이 정하는 교육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교육지침에 비추어 각급 학교의 교과서로서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려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교과용도서로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검·인정받지 아니한 도서의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법 제157조 1항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교수방법의 선택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수업방법 및 기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습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교수·학습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교재의 재구성과 주제 및 문제 중심의 접근, 통합적 교수·방법의 강조, 고차적 사고력과 탐구 기능의 신장, 학습자 중심의 수업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정신의 반영,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다양한 교수·학습기법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세계화·지

역화에 대응하는 학습지도, 정보화에 대처하는 학습지도, 시사 자료의 활용 방안,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지도 등의 방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라. 성적평가권

시험과 성적 그리고 측정하는 평가는 ‘교육’이라는 영역과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학생들은 시험이나 성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 시키는 것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이해하고 학습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과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평가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의 총체적인 과정과 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평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가 수준의 평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해 해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교사는 평가의 전문가로서 학생의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기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더 나은 방향을 학생을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는 평가전문가이다.

마. ??

학습자의 교육권(학습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히 학습권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중핵적 권리로서 학습권은 성장의 욕구를 지닌 아동을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학권이라고 하면서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바. 교사의 수업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교사의 수업권을 교사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 권한으로 규정했다. 수업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냐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제시하고, 설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문의 자유 또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교사의 수업권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은 일정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수업의 자유란 학문연구의 결과를 가르치는 자유를 의미하며, 수업권이란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뜻하며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에 관해서도 수업의 자유와 수업권을 구별하고 있는데 수업의 자유의 근거는 헌법제22조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반면, 수업권에 대해서는 자연법적으로는 부모의 교육권을 신탁 받은 것, 실정법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업의 자유나 수업권보다 국민의 수학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사. 학생징계권

징계권이란 특별권력의 주체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서의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교육법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효력이 따르는 징계처분 이외의 사실행위로서의 학생 징계권은 교사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체벌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교육법상 징계의 범위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합법적인 징계권 행사가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할 수 밖에 없을 경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간제교사의 법적지위

기간제 교사는 교원 수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서 신분보장, 휴직, 정년 등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정규 교원으로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

■ 사례2 :

<사건의 개요> -> 내용 재검토!!!

중학교 교장 A는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날 교직원회를 개최하여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사건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여부의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총 15명의 학생들로부터 현장체험학습을 신청 받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로 하여금 그들의 학부모와 통화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총9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그 결과 A는 8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평가에 결시하도록 하여 사실상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하였다.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교육청의 3회에 걸친 방문조사 및 교육청의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하였다.

해당 교육감은 A에 대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발령하였다.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A교장의 학업성취도 측정 불응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장 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를 측정을 무시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잠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징계사유가 존재할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과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사건의 결말> - 잠탈, 형량??

A는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의 학업성취도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소신에 따라 이 사건 학업성취도평가전날에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부터 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우회적으로 잠탈하려 하였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이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게 하는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것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 등과 형량하여 그들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의 목적과 그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실시 여부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부실한 기재 내용을 근거로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방문에 불과함에도 신청을 허가해줌으로써 학교장에게 부여한 현장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 하였고, 설령 학생들 및 그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였을 것이고, 상급관청인 교육청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상급관청의 방문조사 및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법규위반의 정도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 할 때,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정직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직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가 의견>

교육에 있어 국가와 학교장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는 헌법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관한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고,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목적에서,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사들의 대표이면서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장될 수 있도록 교내교육행정업무를 통괄하는 직무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그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국

가가 형성한 교육에 관한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률과 그 하위 행정입법 등을 성실히 따르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장개인의 교육적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잠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학습>

1.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가. 부모의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나 부모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나.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서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이 상충할 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국민의 수락권(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락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수락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학년과 학과에 따라 어떤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를 검·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관한 한, 교과용 도서의 국정제는 학문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나.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라. 제10조 (소청심사결정)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

가.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58조 (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제59조 (휴직의 사유)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 ②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마.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의 교원은 헌법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바. 제60조의3 (명예퇴직)

-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아.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학습정리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법은 특히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에서 국가공무원법 55(선서) 내지 66조(집단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위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하며(제55조, 선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제57조, 복종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제58조, 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제61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학습평가

문제 1.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소청심사와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1)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시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도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 (4)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해설 : 정답(3)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에는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문제 2.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소청심사결정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4)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 정답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소청심사결정)에는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 3.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상 징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4)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해설 ; 정답 (2)

문제 4. 사립학교 교사 A는 2009.8. 5.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때 교원징계위원회는 2005. 3. 5. 있었던 향응수수건에 대해서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005. 3. 5. 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정당한가?

해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에는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2005. 3. 5. 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부당하다.